

10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

10·16 부산항쟁과 10·18 마산항쟁의 비교분석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논문요약

유신체제시기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체반 모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일 뒤 박정희 대통령이 권부 내 갈등으로 살해되는 10·26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부마항쟁은 이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미완의 항쟁’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연구의 요체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란 주제에 걸맞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주요 쟁점을 통해 비교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과 민중이 주도한 부마항쟁의 시위전개와 경찰과 군에 의한 시위진압이 서로 부딪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및 권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제도의 정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많은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단의 세력들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하는 작태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획득, 항쟁관련자의 증언 청취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며, 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 온 세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응징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 10월 부마항쟁, 부산항쟁, 마산항쟁, 10·26사건

* 이 글은 2017년 12월 1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창간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1979년 10월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 풀리지 않은 부마항쟁의 과제와 산적한 법제도의 정비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연 4일간 발생하여 박정희 정권의 심장을 강타한 10·26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군부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역사적 이정표의 깃발을 세운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2013년도 6월 '부마항쟁보상법'과 2013년 12월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의 국회 통과로 겨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부마항쟁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문제까지 영역을 넓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채 '부마항쟁보상법'에 의존해 왔다.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본위원회)와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소위원회) 및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보상위원회)와 몇 명의 지원단을 두어가며 진상규명 및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해야 하는 당위적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되었다. 국무총리소속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함에 있어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에 바탕을 둔 항쟁관련자의 증언 청취나 현지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에 의한 진실규명에 신중했어야 했다. 또한 부마항쟁 관련 사실이나 피해 관련 신고접수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사실규명을 하는데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첫째,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항쟁관련자들의 진실과 증언에 의존하기보다는 경(警)·검(檢)이 항쟁관련자들에게 소요죄나 긴급조치 제9호를 덧씌우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킨 피의자조서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1순위의 기본서로 하고, 1990년 이전

부마항쟁 관련 자료를 2순위로, 1990년 이후를 3순위의 참고서로 규정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한 준비조치 돼있지 않았다. 특히 당시 목격자 혹은 참여자들의 증언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증거에 의한 진실규명은 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피의자조서 위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필자가 실무위원으로서 마산항쟁의 발발과 관련해 진실이 담긴 새로운 증언과 그동안 조작되고 왜곡된 팩트를 밝힌 바, 그들은 그 증언과 폭로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피의자조서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었다.

둘째, 부산항쟁과 달리 마산항쟁의 경우, 몇몇 주도자 행세를 하는 세력이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조직·장악하면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과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을 독단적으로 펴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진실규명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진실을 호도하면서' 증언관련 기록물의 '조작' 내지 '왜곡'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1989년 당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시 편집 분과장인 정모 씨와 그 제자 박모 씨가 그 실무자였다는 것은 몇몇을 주도자인 양하여 조작과 왜곡을 일삼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당시 편집 책임자를 맡은 정모 씨는 위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마산항쟁의 주도자?인 양 5명의 공소장을 게재하며 그들의 증언 내용을 팩트와 달리 조작해 놓으며 편집을 일삼았다. 이들이 마산항쟁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공식자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산항쟁을 편협되게 편집했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셋째,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마산편을 몇몇이 주도자인 양 증언을 왜곡해서 진실을 호도한 것과 동시에 이미 폐간된 부정기 간행물인 「마산문화」 제4호에 실린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들을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재게재하여 그것이 진실인 양,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더욱 엉터리로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그 필자는 10주년 자료집 발간 시 편집 분과장인 정모 씨의 제자이자 편집 실무자로 참여한 박모 씨로 돼 있다. 그는 항쟁참여자도 아니면서 소위 주도

자?인 척하는 몇몇의 사람들과 합세해서 꾸며놓은 듯한 의문이 많고 검증되지 않고 객관적 평가도 받지 않은 글을 엮었다. 이렇게 조작된 글이 다른 항쟁참여자는 물론 독자들에게 진실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정주신 2017b, 291)은 부산과 마산·창원사람들은 물론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격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지난 2017년 2월 23일 부산에서 개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 보고서」(안) 토론회에서 서울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이 검증되지 않고 평가받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박모 씨 1985; 박모 씨 1989) 글의 많은 부분을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보고서」에 베껴 썼다는 것은 마산항쟁의 조작 및 왜곡을 일삼았던 세력에 동조하여 일방적으로 일시(日時)를 알박기하며 오류투성이의 글을 정당화시키며 마산항쟁을 농단한 것이었다.

필자도 항쟁관련자로서 소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원단이 주도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보고서」(안)에 피의자조서만을 고집하고 특정세력들에 의해서 쓰여진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의 글을 검증조차 없이 무조건 베끼거나 일시(日時)를 알박기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지난 2017년 초부터 10개월 동안 참여한 소위원회를 사퇴하기까지 했다. 본위원회나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진상규명이나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부마항쟁관련자의 피의자조서와 검증되지 않은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 글을 베껴 퍼내고자 하는 등 기본적 양심마저 망각하고 있었다.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부마항쟁 진실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 3년이 좀 지난 2018년 2월 23일 부산에서 개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보고서」(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토론회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보고서」(안)은 토론회 참여자나 항쟁관련자들 다수로부터 엉터리보고서, 요식행위보고서, 거짓 보고서, 진압자 위주보고서, 항쟁관련자범죄보고서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소속 부마위원회가 주관해서 내놓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보고서」(안)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인 자체가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산시민, 마산·창원시민

은 물론 국민들을 우롱하는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은 본래 4월 12일에 펴내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6개월 연장하면서 수정·보완에 들어갔지만, 피의자조서에 불과하고 마산항쟁 전개과정의 조작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요체는 부산항쟁과 달리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이 당시의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되어 오류투성이의 전개과정이 되었음을 증명해보려는 것이다.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란 주제에 걸맞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을 중심으로 비교고찰 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과 민중이 주도한 시위전개와, 경찰과 군에 의한 시위진압이 박정희 정권 및 그 정권의 권력체인 권부에 부마항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극복하지 못한 군부정권이 폭압통치와 물리적 탄압을 내세워 어떻게 시위를 진압했는지, 그러한 폭압적 진압이 반유신세력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고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부마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의 시위전개와 진압과정의 양상을 부산항쟁, 마산항쟁과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양 항쟁에 대한 비교분석으로서의 목적을 지닌다. 특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비교분석을 통해 부마항쟁이 확산되고 동시에 민중항쟁으로 발발, 부마항쟁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마산·창원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하기 이전 군의 진압으로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함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과 분석요인

이 논문의 연구의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부마항쟁 관련 연구 논문과 서적을 살펴보며 연구방법과 분석요인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기존 부마항쟁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첫째, 부마항쟁에 대한 거시적 연구 분석은 주로 기자의 취재 자료(이수연 1985; 조갑제 1987ab) 및 부마항쟁 10주년 자료집(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에 의존해 왔다. 이후에는 위 자료를 근거로 재생산해 출판된(김하기 2004; 서중석 외 2017) 것도 있다. 그 외 학술적인 자료(정주신 2017b; 정근식 1999;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주신의 연구는 기존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마산편과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및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서보고서」(안)을 부정하고 역사적 팩트와 진실에 접근하고자 했다. 또한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전개를 보여준 것(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1990), 혹은 마산항쟁의 군법회의 자료를 통한 피의자조서를 분석한 것(이은진 2008) 등이 있다. 다만 이은진의 연구는 마산항쟁관련자의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에 나타난 피의자조서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부마항쟁에 대한 미시적 연구 분석은 주로 부마항쟁을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경향을 의미한다. 즉 부마항쟁을 도시하층민(김원 2006), 참여노동자(차성환 2008; 차성환 2007), 구술사(차성환 2014)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분야별로 부마항쟁의 배경부터 전개과정을 부산 민주공원에서 피낸 학자들의 글 모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2003)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의 연구적 가치는 소중하나 이 글의 논제가 아니어서 배제하였다. 또 부마항쟁의 전개과정이나 진압과정 측면보다는 그동안의 부마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글(홍순권 2011; 홍순권 2016)도 있다.

셋째,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위에

서 언급한 '부마항쟁 10주년 자료집' 등 왜곡된 글이나 조갑재의 '유고' 책자의 내용을 다른 책자나 언론에 그대로 재생산돼 게재된 자료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즉 「한겨레신문」(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87-99), 「서중석의 현대사이야기: 유신의 붕괴」(서중석 외 2017), 더 나아가 최근에 석사학위논문(최신희 2015)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편 2018)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정주신 2017b, 288).

그러나 기존의 부마항쟁 연구는 거시적이고 미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들이 대중을 이루지만, 부마항쟁이라 할지라도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에 대한 비교분석의 관점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거시적 및 미시적 연구가 부마항쟁의 진실을 호도하거나 조작 및 왜곡해온 기존 글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베끼는 수준이어서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해오지 못하는 한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거시적 분석을 중심으로, 특히 부산항쟁과 달리 마산항쟁에서 특정세력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조작을 일삼은 글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첫째,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에 대한 논의는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민중항쟁으로서 10·16 부산항쟁과 10·18 마산항쟁이 검증과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분석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부마항쟁의 논제는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을 결들여 전개하는 동반자적 관점에서 연구해 온 경향이었으나, 이제는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을 진솔하게 비교평가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본다. 그래서 이 글은 그동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에 대한 비교분석 관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마항쟁을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부산에서 촉발되어 마산으로 확산된 점에서 동시다발성을 보여주나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부산에서 부산대학생이 주도해서 부산항쟁이 발발했다면, 마산에서 경남대학생이 주도해서 발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의 성격과 시민성이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다.

둘째, 부마항쟁이 발발한 지 39년을 맞게 되지만 10·16 부산항쟁과 10·18 마산항쟁의 비교분석을 하면서 부마항쟁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실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부산항쟁과 달리 마산항쟁은 몇몇 특정세력이 전개과정을 조작과 왜곡으로 일삼으며 진실을 호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역사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글 마산편의 몇몇 증언과 검증되지 않고 평가받지 않은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글, 『부마민주항쟁 증언록: 마산편』의 증언 오류투성이 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모 씨와 옥모 씨가 3·15탑 인근 무학초교 앞에서 경찰 검거조에 체포되었음에도 3·15탑 도심시위를 주도했다고 조작해 놓은 것(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78. 180. 190;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엮 2011, 712-714;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엮 2011, 372-373. 712-714; 정주신 2017b, 293-296)이 그것이다. 또한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일시(日時)도 없고 증언자 50명이라고 했으나 증언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참고 문헌도 없는 글로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박모 씨 1985; 박모 씨 1989)이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마산·창원시민들과 항쟁참여자들을 속이며 엉터리로 농단한 경우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 비참여자인 박모 씨가 팩트와 진실에 기반하여 기술됐다고 보기보다는 특정 5인방? 세력이 초창기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사업회'(이후 부산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승계함)를 조직·장악하면서 『마산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을 엮으면서 그곳에 그들만의 공소장을 게재하며 5인방? 중 마산항쟁에 역할이 없었던 정모 씨가 편집 분과장을 맡고 그 제자인 박모 씨가 편집 실무자를 맡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조작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증차대한 기록물과 자료집의 편집 및 발간을 특정 몇몇이서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특정세력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작성한 것은 당시의 팩트와 마산항쟁 정신에 맞지 않게 엮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군부 권위주의체제, 특히 의사민간화 된 직접 지배하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필립 슈미터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제3공

화국과 유신체제 기간 동안 지배한 행위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Schmitter, 1980, 35). 먼저 기득권 정치행위자를 기준으로 집권세력(Those in Power)(또는 범여권)과 비집권세력(Those Out of Power)으로 구분한다. 집권세력(또는 지배엘리트)은 군의 특성을 살린 청와대비서실, 중앙정보부, 내각, 그리고 군부로서의 주체세력(protagonists, 혹은 공안세력)과 군이 정당성과 도덕적 신념의 부재(不在)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조적 민간 조직체인 정당을 만들어 정권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세력인 지원세력(또는 지지세력, 혹은 제도적 집권당과 당원으로서의 비제도적 지지자들)으로 나뉜다. 박정희 정권의 강권통치를 집행하고 뒷받침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 군, 검찰, 경찰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세력(또는 보안집단)이 집권세력 혹은 공안세력인 것이다(정주신 2017b, 105-127). 특히 5·16쿠데타 이후 18년 동안 군부세력은 정치권력의 상당부분이 행정부 및 민간·군부의 정보기관에 의해 행사되는 집권세력이자 주체세력으로 존재해 왔고(Bae-Ho Hahn & Ha-Ryong Kim, 1976, 69-72), 그에 반대하는 비제도적 정치적 반대세력, 즉 반체제세력이 상존해 왔던 것이다. 당시는 군부정권이 권위주의체제로 일관하면서 반민주세력으로 3선개헌이나 유신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강행한 처지에서 그들은 계엄령이나 위수령 및 긴급조치 등 온갖 방어기제를 동원하였다.

넷째, 박정희 정권이 부마항쟁, 특히 민중항쟁에 의해서 유신체제가 붕괴된 측면에서 피지배자적 측면에서 민중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 즉 유신체제와 반유신운동을 대립적 관점으로 볼 때 반유신운동에서 학생세력보다는 민중들이 유신체제를 붕괴시키는 중요한 계층이 되었음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우선 지배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통치기제를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정치권력 밖에 있는 피지배자, 비집권세력에 관한 것이다. 비집권세력은 정권에 의해 배제되거나 무시당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가진 세력인 신민들(subjects)과, 정권에 의해 가치박탈을 당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에게 노골적인 물리적 탄압을 받고 있는 적대세력

(antagonists, 또는 반대세력)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적대세력을 주로 의식 있는 대학생이나 신민들로 구성되는 '비제도적 반대자들'(extra-institutional opposition)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반체제세력들은 국민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중심적'(state-centered), 즉 군부 집권세력과의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신민들은 이 한국사회의 주체적이기보다는 주변적이며, 성공적이기보다는 패배적이지만, 그들이 처한 빈약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독재체제에 저항하면서 신민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진다. 신민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고한 지배세력에 저항하여 현실을 타개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때 반체제세력이 집권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은 그들의 제반 모순과 폭압성 및 비정당성, 국민참여 배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집권세력들은 비(非)집권세력의 저항이나 시위 등에 대해 폭동이나 반란, 폭동이나 모반, 구속이나 불구속 등 불법성과 폭압성을 가지고 처리하면서 수많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요컨대 주로 유신 집권세력(대통령, 권부들, 유신세력)과 유신 반대세력(학생, 신민, 시민) 간에 '밀고 당기는' '밀당'(push and pull)의 투쟁양태는 다음과 같다. 시위 ⇔ 정보수집, 대치 ⇔ 분산, 대응 ⇔ 체포, 극렬 ⇔ 구속이란 살벌한 행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마항쟁은 지배세력과 반유신세력들 간의 대립과 저항, 탄압과 구속 등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 온 밀당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양태는 부산과 마산지역의 학생들과 민중들에 의한 반유신시위가 경찰이나 군의 진압에 대응하여 '치고 달리는'(hit and run) 게릴라식의 투쟁방식을 이끌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부마항쟁을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으로 분간하되 전개과정과 진압과정의 특성을 유신세력과 반유신세력(부마항쟁세력) 간의 행태적 요인과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라는 지역적 차별요인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Ⅲ. 부마항쟁의 시위전개 양상

부마항쟁 시위의 발단은 첫째, 교내시위와 관련해서는 10·16 부산대 교내시위 상황과 10·18 경남대 교내시위 상황으로, 둘째, 도심시위와 관련해서는 부산 10·16 도심시위 상황과 마산 10·18 도심시위 상황으로 구분된다. 교내시위는 대학생만의 시위였고 도심시위는 대학생과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합세한 상황에서 시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부산대 교내시위와 경남대 교내시위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나, 도심시위 양상은 민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산과 마산지역 시위에 동질감을 보여주었다.

1. 부산대 교내시위와 경남대 교내시위의 배경

부산대의 시위발단은 '유신대학'으로 회자되던 만큼, 1979년 10월 15일 시위 1팀, 시위 2팀의 시위 의도와 전개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데서 찾을 수 있다. 시위 1팀, 2팀의 똑같이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이라는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유인물이 뿌려지기 시작했지만, 자신들만의 계획된 방향과 달리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시위 팀과 학생들 간의 엇박자는 그동안 부산대 교내시위가 없었다는 증거다. 교내시위가 좀처럼 없었던 부산대에서 시위 1팀, 시위 2팀의 시위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1팀과 2팀에 의한 시위계획의 중도 좌절은 부산대 교내시위를 다음날인 16일 또 다시 준비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경남대 시위는 1960년 4·19이래 교내문제이든 시국문제이든 시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신대학'으로 불려졌다. 이런 이미지는 경호실장인 박종규가 박정희 정권의 권세를 업고 경남대와 마산MBC를 헐값으로 사들이고(김진 1992, 167) 군부정권의 하수인으로 있던 시절 경남대가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경남대의 시위발단은 '유신대학'

으로 회자되던 만큼 시위가 전혀 성립될 수는 없었지만, 부산시위가 연이
 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부산을 오가던 학생들이나 시민들에 의해 부산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의 전파만으로도 즉자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0월 18일 오전 12시경 점심때부터였다. 점심시
 간에 너도나도 부산시위 소식 상황을 접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모양새였다.

2. 부산대 교내시위의 결사항전 & 경남대 교내시위의 실패

부산대생의 경우 1차 시위계획은 9월부터 1팀과 2팀 두 팀이 분리하여
 구체화시켰던 것이다.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에서 각각 교
 내시위의 행동계획과 D-day를 잡고 13일에 사전준비와 최종점검을 마친 상
 태였다. 그러나 1팀과 2팀의 행동계획과 D-day 설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대의 경우, 16일 교내시위의 성공은 15일 교내시위의 실패
 가 보여준 학습효과의 덕택이었고 경찰의 과잉진압이 한몫 했다. 선동자를
 체포하려는 사복경찰의 과잉체포 시도는 학생들과 사복경찰들
 과의 5분간 난투극이 벌어지며 부산대 시위에 학생과 경찰 간의 첫
 충돌로 불을 지른 격이었다. 사복경찰 두 명이 선동한 학생을 향해 뛰
 어들어 멱살을 잡자, 그쪽으로 몰려간 학생들은 형사 두 명을 포위하고
 못매를 가하며 3m 언덕 아래로 떠밀었다. 이 사건 이후 5백여 명의 학
 생들로 시작된 시위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스크림을 짜고 분
 관과 운동장을 거쳐 신정문으로 내려가 경찰과 투석전으로 맞서며 시위
 를 벌였다(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1990, 15). 이처럼 부산대 교내
 시위는 선언문의 배포와 더불어 유신체제의 모순을 항거하는 시위로 발
 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산대 교내시위의 목표는 '민주선언문'에 게
 재되었듯이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라는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명
 백한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다. 박기채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이 몰려와 "학생들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해산을 종용했

다. 이에 학생들은 그들을 향해 "어용교수 물러가라."고 되받아쳤다(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1990, 15). 부산대생들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면서도 가두시위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구정문과 신정문 및 사대부고 등 출구가 세 방향으로 분산되어 시위를 전개시킬 수 있었던 데에 있다. 부산대의 경우 학생 시위대는 누가 주도자라고 할 것 없이 경찰의 1차방어선인 교문을 마주보고 부딪치고 있는 경찰과의 대치상태나 공방전을 거쳤으며, 제2, 제3의 장소를 제시하였다. 부산대생이 가두시위를 펼치면서 도심시위로 진출하고자 했을 때, 경찰은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한 후 제2방어선(서면로터리)과 제3방어선(부산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경남대의 경우 경남대생의 교내시위에 행동계획과 D-day가 없었다는 것은 선언문이나 시위 구호 및 노래 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이다. 자칭 일부 시위모의자?들이 증언과정에서 D-day를 21일?, 22일? 24일?로 예정됐었다고 늘어놓으나, 모의예정 날짜도 제각각이고 증언도 틀릴 뿐이다. 10월 18일 마산시위는 부산시위에 쇼크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이뤄진 결과였지, 그들의 계획이나 D-day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당시 교내시위에 참여한 최청호 씨의 증언을 참고 바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196; 이은진 2008, 113). 10월 18일 오후 2시경 도서관 앞에서 1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 선동자의 선동연설로 교내시위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선동자의 경우 민주선언문도 없고 시위 목표와 방향 및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남대와 학생들의 무지몽매함을 얘기하는 선동만으로는 교내시위가 유신체제의 모순을 도전하리만큼 불을 당기지는 못했다. 즉흥적인 선동연설조차 유신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 아니어서, 모인 사람들이 시위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교문밖에 설치한 1차방어선에 차단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위 구호도 없는 군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남대 학생들은 시위를 이끌 주체나 조직력이 없고 목표 또한 부재한 상태였다. 그 결과 부산대 학생들처럼 스크럼을 짜거나 소위 '유신철폐' '박정권 타도'와 같은 정치적 구호나 '우리

의 소원은 자유'라는 노래도 없었다. 그런데 10월 18일 부산시위 소식이 전해지고 경남대생들이 시위대학인 양 교내시위 당시 시위 구호를 외치고 시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며 경찰이 피의자조서에 조작한 오류투성이일 뿐이다. 경남대의 경우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보면, 팩트와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89, 179). 예컨대 최모 씨의 경우 정모, 박모, 이모, 신모 씨 등과 교내에서 유인물을 뿌렸다고, 옥모 씨와 둘이서 줄을 세워 선구자와 애국가를 부르라 했다고 조작하고 있는 것과, 또한 최모 씨의 경우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분필 몇 개로 3:15탑에서 오후 5시에 모이자 등을 썼다고 거짓 증언하고, 바바리 입고 하이힐 신고 있는데 씨름선수들이 달랑 들어내 버렸다는 엉터리 등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옥모 씨의 경우 산복도로를 통해 3:15탑을 가는데 50~60명이 유신반대와 독재타도를 외쳤다고 하나(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2013, 372-373), 이는 팩트와 전혀 다른 증언을 한 것이다. 경남대 교내시위 실패 후 마산항쟁의 진실 호도로 건강부회하며 일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개과정의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다. 한편 부산대 교내시위는 경찰이 학생들의 시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제1방어선인 교문을 돌파하여 뚫린 틈새(gap)를 이용하여 가두 시위로 진척시킬 수 있었던 반면, 경남대 교내시위는 교문 앞 제1차방어선에 막혀 시위의 한계를 노정했다. 시위 구호나 노래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대략 1시간여 흐른 뒤 몇몇이서 '도심 창동으로 가자', '3:15탑에서 만나자'라는 방향 제시에 따라 군중들이 삼삼오오 내지는 10명 이내로 분산되어 학교 후미진 골목을 넘어 산복도로를 끼고 도심으로 향할 수 있었다(정주신 2017b, 290). 교내시위 실패 후 도심 창동네거리로 가서 즉자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산항쟁이었다. 그래서 교내시위가 실패로 끝나자 일단의 학생들이 학교 후미 담장이 없는 틈새(gap)를 이용하여 산복도로를 타고 소규모로 불규칙적으로 3:15탑 쪽으로 이동하였을 뿐, 시위대 형성이 용이치 않았다.

요컨대 교내시위에서 부산대와 경남대의 학생들이 시위의 목표와 방향 및 선언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현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5일 시

위모의팀(1팀, 2팀)의 교내시위 좌절과 분노가 16일 부산대 교내시위에서 반전을 이뤘던 것이다. 즉자적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심시위의 성립을 가져온 것이다. 반면, 18일 경남대 교내시위는 부산시위가 교내에 전해지면서 즉자적인 시위를 펼치려 했으나 부산시위의 본질인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을 학생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해 모호성을 노정하였다. 경남대 교내시위의 실패가 가두시위는커녕 도심시위로 시위에 불을 당기지 못한 채 학생들의 기대치와 엇박자나고 불발되었다. 결국 부마항쟁은 항쟁기간 초기 교내에서 일부 학생에 의해 선동되었는지는 몰라도 교내시위가 특정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산대나 경남대처럼 선동자만 있었고 주도세력 없이 즉자적 시위로 전개된 것이었지, 교내시위가 특정 학생에 의해 주도되지 못하고 지도력 한계를 내비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런데 경남대 시위는 부산대 시위와 달리 시위모의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몇몇은 스스로 주도자?인 양, 교내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초기 마산항쟁의 진실을 조작하고 농단하였다.

<표 1> 전개과정에서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쟁점사항 비교

쟁점	부산항쟁	마산항쟁	비고
① 시위 발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15일 시위 1팀과 시위 2팀의 동시적 시위 불발과 학생들의 잠재적 참여 가능성 표출 ·10월 16일 '민주선언문'을 낭독과 학생들의 적극 동참 ·폐정개혁안 등 유신체제의 제반모순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6 부산시위가 10·18 마산시위로 확산 ·부산시위에 따른 10·18 교내시위는 선언문 조차 없이 즉흥 선동연설에 의존 ·선동연설은 학교와 학생들 비난이었지, 유신체제의 제반모순과 동떨어짐 ·부산시위 발생이 마산시위에 즉자적 동기 부여 제공 	차이
② 교내 시위의 성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일 부산대 교내시위의 발발은 15일 1, 2팀의 교내시위 실패가 보여준 학습효과 ·경찰 일부가 부산대 교내침투 후 주도자 과잉진압에 따른 학생들의 시위참여 증가 ·부산대생 5백여 명 스크립 짜고 교내 운동장 돌며 학생참여 유발 ·부산대 교내시위가 경찰의 1차 방어선인 교문을 뚫고 가두시위나 도심시위로 확장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맞선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와 '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대 교내시위의 형성은 부산시위에 대한 상황 파악과 응성거함이 시위 단초 ·시위 지도부 없이 시위 목표와 방향이 없는 선동연설로 인한 교내시위 실패 초래 ·교내시위가 불발과 3백여 명의 군중의 혼란 ·교내에서 일체의 시위구호나 시위노래 없었음 ·경남대 교내시위가 경찰의 1차방어선인 교문을 뚫지 못하고 정체됨 ·교내시위 실패 이후 학교 뒤편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산복도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함 	차이

	가' '부산대 교가' '우리의 소원은 자유' 등 노래로 시위대의 열기를 보여줌	·교내시위의 실패였으나, 주동자:5인방 10주년 맞아 자료집 보내면서 자신들 공소장 게재하고 진실 호도와 왜곡	
③ 교내 시위 D-day 와 시위 지도력의 문제	·1팀과 2팀의 D-day는 1979년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16일 교내시위도 같은 장소와 일시 ·16일 교내시위는 15일 실패가 준 교훈으로 성사 ·15일 탐파 16일 팀 모두 시위 지도력에 한계	·예고 없는 교내시위로 우왕좌왕하고 지도부 부재 ·증언에서는 D-day를 21일? 22일? 24일?로 제각각 ·뚜렷한 행동계획 없는 D-day 조작설 ·급조된 교내시위로 지도력에 한계, 이후 즉자적 대응	차이
④ 학생 시위의 도심 진출 과정	·부산대 교문에 설정된 경찰의 제1방어선 붕괴 ·시위대 제1진, 제2진, 제3진으로 분류하여 구경문, 신정문, 사대부교 방향 이용 시내로 진출	·경남대 교문에 설정된 제1방어선에 교내시위 실패 ·학교 운동장 및 통로를 빠져 산복도로를 이용 도심 진출 ·3-15탐 주변에서 최모, 옥모, 정모 등 5인방? 일부가 체포된 것을 시위를 주도했다고 왜곡	차이
⑤ 도심 해방공간의 활용	·16일 오후 2시경 도심 부영극장 앞에 해방공간을 확보하면서 5만여 명에 이르는 인파가 대중집회를 개최하며 도심거리를 점거	·18일 오후 5시 20분경 창동네거리에서 첫 도심시위(창동-불종거리-기아백화점-불종거리) ·18일 오후 6시 40분경 오동동 불종거리에 대략 2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하면서 해방공간 확보	공통
⑥ 시위 계층의 다양성	·부산항쟁은 대학생이 주도했으나, 하층도시민, 중국집 배달원·술집 종업원·노동자·구두닦이, 중고교생 일부 등 도시민 참여	·부산항쟁처럼 마산항쟁도 초기에 대학생이 주도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의 민중들, 도시하층민이 항쟁의 주력	공통
⑦ 게릴라 전술식 대응	·16일 오후 2시경 기동경찰을 투입대치되고 최루탄이 발사되면서부터 게릴라전술식 대응 ·경찰과의 대립시 '치고 도망가는'(hit and run) 게릴라식 전술	·18일 오후 6시 40분경~ 7시 30분경 경찰의 부속으로 시위대가 도심을 장악했으나, 시위대가 도심의 특성상 분산은신 이후 다른 변화가에 재집결해 경찰병력을 분산 교란 ·마산시위의 경우 18일 오후 9시경 경찰과의 게릴라전술을 펼칠 수 있었음	공통
⑧ 즉자적인 시민 참여	·학생 중심의 항쟁지도부가 미숙했고 조직화 정도도 미약 ·즉자적으로 참여한 불특정다수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냄	·주체세력에게 비정치적이고 약자이고 사회로부터 배제당해 온 신민(臣民)들 ·신민의 카테고리 속에서 즉자적으로 참여로 시민으로 신분이 바뀐 시민들	공통
⑨ 질적 규정상 투쟁 양상	·독재권력에 결부되었던 공공건물이나 특정인의 자택 파괴, 방화로 나타남 ·유신체제의 국가권력기구들의 파괴 내지는 방화를 가져온 점	·정권측에 결부된 건물과 특정인을 상대로 타격과 방화를 통해 이뤄진 질적 규정	공통
⑩ 항쟁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시민들의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위대의 사기를 고무·격려 ·시위대를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부산항쟁처럼 시위대를 숨겨주거나 음료수나 빵 등 시위대에 답지한 물품도 없었음 ·일반시민들의 격려나 성원과 지지조	차이

성원과 지지	빵, 음료수, 김밥, 담배, 물수건 등 제공	차 없었음	
⑪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라는 시위구호	·시위대의 구호는 주로 '계엄철폐' '독재타도' '유신철폐' 등,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유' '애국가 제창' 등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투쟁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라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주장이 도심에서 일부 발생 ·유신체제 전반의 모순에 대한 의미하는 대국적 불만이 정치적 구호보다는 '불 꺼' '불꺼'로 일관	공통
⑫ 비(非)수도권에 서 이룬 민중항쟁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최초 발생 ·남도 부산에서 발화된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인근 마산으로 확산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비(非)수도권에서 발생	·10월 18일 마산과 창원과 인접 통영으로 확산 ·부산과 마산에 고립된 항쟁으로 성격으로 규정 ·박정희 대통령과 권부내 갈등으로 10·26유발 ·부마의 민중항쟁이 5·18광주항쟁에 영향을 줌	공통
⑬ 박정희 대통령의 상황판단 착오	·그 원인을 '신민당의 조종'에 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민중들을 식당보이, 풀마니, 깡패 에 의한 불순분자 혹은 지각없는 행동으로 매도 ·부산사람들이 김영삼 총재의 선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해 온 탓이라 그 댓가로 나타난 신민당의 조종이란 표현 ·대통령의 정국인식의 부재와 오판은 권부들의 갈등으로 10·26사건(박정희 대통령 사망) 초래	공통
⑭ 김재규의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	·학생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고 해 '민란' 주장 ·체제저항과 조세저항까지 걸친 민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도시로 확산	·부산과 마산의 항쟁은 직접 현장에서 본 바 그것은 단순한 학생테모가 아닌 대부분 민간인 ·서울 및 전국 도처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민중봉기에 대한 대응책 모색	공통
⑮ 정권 내부 권부간의 갈등 유발	·부마항쟁은 박정희 대통령 지근의 김재규 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간의 권력다툼으로 비하 ·10·26사건 촉발	·부마항쟁은 차지철의 무례와 박정희의 강력한 집권욕에 기인한 김재규의 심리적 변화로 촉발 ·10·26사건의 단초	공통

출처: 필자가 작성

3. 부산대생의 도심 진출과정 & 경남대생의 도심 진출 왜곡과정

부산항쟁은 '유신대학'으로 회자되던 부산대학교 1천여 명의 학생들이 16일 오전 12시경 구정문과 신정문 및 사대부고 등 세 방면을 출구로 하여 가두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1진은 구정문 앞 네거리에서 경찰과 혈전을 벌인 좁은 거리에서 페퍼포그와 곤봉에 대항하면서 '치고

빠지는' 케릴라전식의 전진과 후퇴를 되풀이했다. 그 중 일부는 신정문 시위대와 합류했고, 약 1백여 명 정도가 구정문 우측 골목길을 통해 식물원과 온천장 방면의 출구로 향했다. 제2진, 제3진에 비해 비조직적으로 진출한 제1진은 온천장에서 제2진과 합류했다. 제2진 시위대는 또 다시 사대부고 담을 뚫고 곧바로 산업도로로 진출하며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를 외치며 온천장으로 진격했다. 가장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던 제3진 시위대 6백 명~7백여 명은 제2진 시위대가 진출한지 20분 후 사대부고로 진출을 시도하여 경찰과 접전을 벌이면서도 제2진 시위대의 뒤를 따라 산업도로와 온천장으로 향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부산대 교문에 설정된 제1방어선이 붕괴되자 서면로터리를 제2방어선, 부산역을 제3방어선으로 잡고 학생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를 세우고 일대 검문에 나섰다.

반면 마산항쟁은 초기 경남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3백 명 안팎의 군중들 중에서 일부가 교내시위 실패 이후 불규칙적으로 삼삼오오 정도의 인원이 학교운동장 근처 고시원 밑 통로를 빠져서 산복도로를 타고 도심 거리에 나섰지만, '유신대학'에 걸맞게 가두시위조차 없었다. 그 까닭은 불규칙적으로 삼삼오오 내지는 6~7명 정도가 산복도로 타고 도심으로 향했기 때문에 가두시위가 없었을 뿐(정주신 2017b, 291)이었지, 공소장의 표현대로 2백여 명의 조작된 인원수도 형성되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경 경찰 2인1조의 검거조가 3·15탑 주변에 배치되어 집결조차 못해 도심시위가 시작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경남대생의 경우 도심으로 가다가 오후 4시30분경 도심 3·15탑 근처에 이르러서 경찰 2인1조 검거조에 소위 5인방? 운운하는 몇몇이 체포되거나 검거되었듯이, 시위 계획이나 주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도자?로 행세하며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이나 『부마민주항쟁 증언록: 마산편』 등에 엉터리 증언으로 교언영색하며 마산항쟁의 진실을 호도하며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다. 소위 5인방? 몇몇이 자신들의 행적을 숨기고 교내시위와 3·15탑 주변시위를 했다고 거짓 진술과 왜곡 및 조작을 일삼아 왔고, 이를 증거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챙겼다(부산일보, 2012/04/05; 경

남도민일보, 2012/11/12). 앞서 제2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마산의 도심시위는 예고 없이 즉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오후 5시20분경 경남대생 일부, 즉 필자를 비롯한 몇몇이 창동네거리 조흥은행 앞에서 도심시위를 최초로 일으켰다(정주신 2017b, 23, 290, 296-297). 이후 20명 안팎의 선도시위대는 창동네거리에서 출발하여 불종거리와 가야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애국가'와 '우리의 소원은 자유' 노래와 '독재타도'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며 진군하였고, 다시 가야백화점에서 계단토론 이후 오후 6시 40분경 불종거리로 시위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회군하던 중 불종거리에 대략 2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4. 도심의 해방공간을 활용한 시위양태의 부마항쟁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은 유신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저항의 근거지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신체제 타도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였다. 우선 부산항쟁의 경우, 부산시위 집결지로 '2시 부산역'로 했다가 이곳이 부적당해서 '2시 부영극장 앞'으로 방향을 바꿔 장소를 택했던 것도 도심에서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저항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부산항쟁은 16일 오후 2시경 부영극장 앞 육교를 중심으로 시청 앞에서 충무동에 이르는 4차선 도로와 광복동 일대를 짝매운 거대한 대열의 형성으로 도심의 해방공간을 확보하면서 5만여 명에 이르는 인파가 대중집회를 개최하며 도심거리를 점거했던 것은 그 자체가 '부산항쟁의 해방공간'이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도심시위는 '도심의 해방공간'을 벗어나면서 부산 전역에 이르기까지 경찰서나 파출소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유신체제에 적극 협력한 곳에 타격을 가하거나 방화를 하면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반면 마산항쟁의 경우, 마산에서의 도심 해방공간을 이용한 양태는 18일 오후 6시 40분경 불종거리로 선도시위대가 시위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회군하던 중 불종거리에 대략 2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해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오동동 불종거리에서 선도시위대와 시민들의

전격적인 합세는 경찰 일부가 도망가면서 시위대가 '도심에서의 해방공간' 하에서 시위를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경찰이 놓고 달아났던 경찰트럭을 오동동다리로 밀어 빠트리거나 박종규 공화당 의원 마산 사무실에 돌팔매질과 파출소 집기에 타격을 가하거나 방화를 일삼았다. 이후 마산시위는 학생과 시민들이 오동동 불종거리에서 북마산이나 자유수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량 파출소의 파괴와 방화 등으로 경찰에 대응하면서 시위를 감행하였다.

5. 불특정다수 시민들의 동참으로 시위계층의 다양성을 가져온 부마항쟁

부마항쟁은 대학생을 비롯해서 소시민, 영세상인, 도시빈민,接客업종업원, 자영업자, 노동자, 재수생, 고등학생 등 하층도시민과 학생들의 주참여계층이 가세한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는 1960, 1970년대를 통해 시위 자체가 학생시위나 명망가들 참여에 의한 시위와 상반되는 기층민중적인 시위로 탈바꿈된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3·15부정선거와 4·19혁명과정에서도 부산시민과 마산시민들에게 독재자를 타도한 저력 있는 민주성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과 신민(臣民)들, 기층민중의 합작품이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마산에서의 항쟁은 도시하층민이 항쟁의 주력이 됐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항쟁이 즉자적인 반유신 민중봉기가 아니라 야당의 선동으로 발생한 '불순분자들'의 행동이나 '식당보이'나 '똥마니', 그리고 '깡패' 등에 의한 단순한 소요로 본 행태(조갑제 1987, 124)는 통치자로서의 애민의 입장이기보다는 영구집권을 피하기 위해 민중을 천민으로 본 발상이었다.

6. 시위대의 게릴라전술로 일관한 부마항쟁

부마항쟁은 경찰이나 군의 기습적인 체포에 대비해서 집결 후 분산되는 시위, '몽꿨다 흩어지고' '다시 몽치고 빠지는'('hit and run') 식의 게릴라전술이 시위대의 주요 전술이었다. 시위대가 분산 은신 후 다른 변화가에 재집결, 2백~5백 명씩 다방면으로 나타나 고성을 지르며 경찰병력을 분산 교

란하는 'hit and away' 방법을 통금시간 전후까지 반복하였다. 부산시위에서 시위 가담자들이 경찰과의 게릴라전술(hit and run)을 처음 구사한 것은 16일 오후 2시경 5백여 명 학생들이 부산시내 광복동 네거리에 집결,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을 외치자 1천5백여 명의 기동경찰이 투입·대치되고 최루탄이 발사되면서부터이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경찰에 쫓기는 시위자들을 은신시켜 경찰의 진압을 곤란하게 하기도 했다. 마산시위의 경우 경찰과의 게릴라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마산의 경찰력이 부족했던 18일 오후 9시경이었다. 이후 부마항쟁시 시위대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군과의 조우시 게릴라식 전술을 펼치면서 '치고 빠지는' '치고 달리는' '흩어졌다 재결집하는' 등의 전략으로 경찰과 군의 제지를 막아내고 적극적인 대응과정을 보여주었다.

7. 즉자적인 시민참여가 불러온 민중항쟁

부마항쟁은 학생 중심의 항쟁지도부가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 정도도 미약했다. 그렇다보니 즉자적으로 참여한 부산과 마산 두 지역의 계층은 대학생 및 고교생보다는 소시민, 기층민중, 노동자, 고교생, 영세상인, 도시빈민들이 항쟁의 꽃을 피운 결정체 역할을 해냈다. 왜냐하면 항쟁자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할 것 없이 내가해야 할 일로 책임감 있게 즉자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정주신, 2014, 54). 그러므로 항쟁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활화산으로 만든 주체세력은 그동안 비정치적이고 약자이며 사회로부터 배제당해 온 노동자, 영세상인, 도시빈민, 자유노동자,接客업소 종사자, 도시 룬펜계층 및 무직자 중심의 신민(臣民)들이다(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394). 여기서 신민들은 보통 때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시위대를 주력화 시키는 행동대, 즉 신민의 카테고리 속에서 즉자적으로 참여였으나 부마항쟁을 겪고 난 이후 시민으로 신분이 바뀐 시민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즉자적으로 불특정다수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대중투쟁의 방향을 전환 시켰다고 볼 수 있다(정주신, 2014, 63).

8. 민중봉기의 질적 규정상 투쟁양상을 가져온 부마항쟁

민중봉기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풀뿌리 민중들의 운동양태를 의미한다. 김재규 정보부장이 10·26재판에서 부산과 마산지역을 직접 방문해 부마항쟁이 단순한 학생시위가 아닌 민중봉기로 증언한 것처럼,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대다수 소시민, 중산층, 노동자들의 참여를 가져온 민중항쟁이다. 이들이 군부 독재정권에 협력한 공공관서, 파출소, 지구당 사무소, 방송국 등 유신체제의 국가권력기구들이 파괴 내지는 방화를 가져온 민중봉기의 형태를 지녔다. 민중봉기의 투쟁양상은 독재권력에 결부되었던 공공건물이나 특정인의 자택 파괴, 방화로 나타난 데서 질적 규정상 민중항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재규 정보부장이 10·26재판에서 증언했듯이 시민들이 시위대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디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 일심동체 그 자체였다. 반면 마산항쟁은 부산항쟁처럼 시민들에 의한 시위대를 숨겨주거나 음료수나 빵 등으로 시위대에 답지하거나 성원 및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부산항쟁처럼 유신체제에 협력한 공공관서, 파출소, 지구당 사무소, 방송국 등에 파괴 내지는 방화로 일관했다. 결국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시위대가 유신체제의 국가권력기구들의 파괴 내지는 방화를 가져온 것이나, 정권측에 결부된 건물과 특정인을 상대로 타격과 방화를 통해 이뤄진 질적 규정상의 민중항쟁이었다.

9.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라는 시위구호를 외친 부마항쟁

부마항쟁은 유신치하, 특히 긴급조치 하 반체제운동의 일환이자 결론이라는 점에서 시위대의 구호는 주로 '계엄철폐' '독재타도' '유신철폐'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그 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유' '애국가 제창' 등으로 이어졌다. 부마항쟁에서 정치적 성격의 구호가 남발됐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18년 통치에 대한 염증의 발로가 항쟁으로 승화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산의 경우 단발적인 '김영삼 제명 철회' 구호가 나왔을 뿐이다. 부마항쟁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주요 목표로 내세운 것만 보더라도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투쟁이었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김영삼 총재만의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대한 국소적인 불만이 아니므로, 부마항쟁의 원인은 박정희 정권 타도, 즉 유신체제 전반의 모순에 대한 의미로 '유신철폐'와 '민주회복'이라는 대국적 불만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부산항쟁의 구호인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민주회복'과 마산항쟁의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불 꺼' 등에 나타난 민중들의 외침에서 찾을 수 있다(정주신, 2014, 55).

10. 비(非)수도권에서 이룬 민중항쟁

부마항쟁은 10월 16일 부산에서 발생하여, 10월 18일 마산과 창원 등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어 민중운동으로 번졌다. 18년간 통치를 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과 폭압성이 지나치면 이를 반대하는 민중항쟁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향각지로 비화되는 발화성을 지님을 반증하고 있다(정주신, 2014, 60). 그런데 부마항쟁이 부산과 마산이라는 남도에서 발화된 것은 기존 수도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비(非)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응집력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부산과 마산에 고립된 항쟁으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으나 비수도권에서 이룬 부마항쟁은 5·18광주항쟁에 영향을 준 것이었다. 어쨌든 부마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과 폭압성에 맞서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권부내의 항쟁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시켜 박정희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중차대한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1. 박정희 대통령의 부마항쟁에 대한 상황판단 착오

박정희 대통령은 부마항쟁에 대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보고를 무시하고 그 원인을 '신민당의 조종'에 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다(육본

계업고등군법회의, 79고 균형형 제550호, 「항소이유서」).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은 10·26만찬에서 부마항쟁이 부산사람들이 김영삼 총재의 선동으로 일으킨 것이라는 생각이 대통령 의중에 박혀 있었으며 이에 차지철 경호실장도 동조하였으나, 김재규 정보부장은 "안 그렇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주도해 온 탓이라 그 댓가로 나타난 신민당의 조종이란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판단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정주신, 2014, 65).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국인식의 부재와 오관은 부마항쟁을 둘러싼 권부간의 갈등이 부메랑이 되어 김재규 정보부장이 대통령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IV. 부마항쟁의 시위진압 과정

여기서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을 꾀하는 의미에서 부산지역과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의 시위진압 양상을 주요 쟁점으로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과 강경진압,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한 부마항쟁 관련자의 남민전과의 연계성 음모, 마산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사제소총을 들먹인 경찰, 계엄령과 위수령에 의한 군 투입과 계엄위원회(부산) 및 비상시국회의(마산) 개최, 부마항쟁 과정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 방지 등에 대하여 적요하고자 한다.

1. 시위진압의 초점은 불순분자나 폭도들에 의한 소요사건

박정희 대통령은 10월18일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지각없는 일부 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했고, 치안본부는 시위양상을 볼 때 "우발적인 군중 시위행동이 아닌 조직적인

1)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kbs2240/183502>(검색일: 2017/08/20).

폭거와 불순세력이 개입한 징후가 농후하다."(동아일보, 1979/10/18)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는 불특정다수의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일부 경찰서나 파출소, 어용 언론사, 관공서 등이 불에 타거나 파손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시위진압자들이 시위진압시 계획해서 고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무력화(paralyze)시키기 위한 조치로 폭압적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과 군이 방송센터, 전화국,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는 것이고, 통행금지과 시위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김영수 역, 1989, 153).

2. 박정희 대통령의 부마항쟁 인식과 강경진압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8일 자정(0시)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즈음한 특별담화문에 언급되었듯이 부산항쟁을 "지각없는 일부 학생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동아일보, 1979/10/18)이라고 했지만, 순수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한 반유신운동의 일환이었다. 부마항쟁은 민중들의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저항과 항거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부마항쟁의 원인을 대학생의 학내 문제, 즉 부산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으로서의 체면유지 데모, 교내 데모 과잉진압에의 분노, 경남대학의 경우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으며(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1990, 39), 야당인 '신민당의 조종'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다(조갑제 1987b, 137). 그리고 시민들을 '식당보이'나 '똥마니', 그리고 '깡패' 등 불순분자로 보고 역시 '신민당의 조종'에 의해서 지각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매도했다(조갑제 1987b, 137). 그리고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행정 조직,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의 사적인 정보기관 등 박정희 정권의 체제위기에 대한 모든 촉각은 부마항쟁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 수집과 진압 쪽으로 풀가동되기 시작했다(조갑제 1987b, 79). 부산의 비상계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폭동적 시위진압 주장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은 강경파인 차지철 경호실장이었다. 그는 18일 새벽에 서울의 공수여단을 부산으로 공수하고 군수사령관 박찬궁

중장에게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을 맨 처음 통고하였다. 차지철의 이런 월권행위는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과의 사전 상의 없이 이뤄졌다(조갑제 1987b, 50). 김재규 정보부장은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박찬공 중장에게 "데모의 징후가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니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연행자들을 서둘러 선별하라."(정주신 2017b, 225; 조갑제 1987b, 52)는 골자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두 번이나 직접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박찬공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산은 당신의 책임 구역이 아니지만, 현지 부대장(조옥식 제39단장을 지칭-필자 주)과 의논하여 자네의 책임지역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라."(조갑제 1987b, 79)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부마항쟁이 민란이란 보고를 무시해 버리면서,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대통령인 내가 발포명령 내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대통령인 나를 사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정주신 2011, 297; 조갑제 1987b, 56)라고 말하였고, 차지철 경호실장은 이에 대응하여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 우리 데모대원 1~2백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 질 것이라고 했다(정주신 2009, 420). 훗날 김재규 정보부장은 재판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조갑제 1987b, 143)고 말했다. 결국 뒤이어 집권한 신군부는 광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폭압성 '유지'를 계승했다.

< 표 2 > 진압과정에서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쟁점사항

쟁점	부산항쟁	마산항쟁	비고
① 불분분자들의 소요	·시위는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점점 격렬 ·우발적인 군중 시위행동이 아닌 조직적인 폭거로 조직적인 불순세력이 개입에 의한 소요로 파악	·정권에 협력한 경찰서·파출소·언론사·차량 등의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방화 ·시민들의 반발을 무력화(paralyze)시키기 위한 조치	공통
② 박정희 대통령의 부마항쟁 인식과 진압	·데모의 징후가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니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사항 ·지각없는 일부 학생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의 난동 ·자발적인 반유신민증봉기가 아니라 신민당의 조종으로 발생 ·박정희 정권의 체제위기에 대	·박찬공 계엄사령관에게 마산은 당신의 책임 구역이 아니지만, 현지 부대장(조옥식 제39사단장을 지칭)과 의논 협조 논의 ·'식당보이' '똥마니' '짱패' 등 불순분자들이 신민당의 조종에 의해서 지각없는 행동 ·박정희 정권의 강경진압으로 타 지역과의 연대투쟁 못 미침	공통

	<p>한 모든 촉각은 부마항쟁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 수습과 진압 쪽으로 쏠가동</p>	<p>·강경진압을 예고한 박정희는 김재규의 부마항쟁이 민란이란 보고를 무시</p>	
<p>③ 부마항쟁 관련자의 진면목과 연계성</p>	<p>·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을 남민전과의 연계를 두고 강압적인 수사 지시 ·남민전 사건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충성경쟁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뒤지게 된 결정적 계기 ·경찰이 부마항쟁관련자들을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두고 고경간첩이나 남민전 지령으로 고문하며 용공사건으로 조작</p>	<p>·부마항쟁을 일련의 조직사건으로 묶어 항쟁의 확산을 차단할 목적 ·중앙정보부가 적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적발로 김재규 정보부장의 대통령에게 신임 없음 ·부마항쟁을 북한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항쟁관련자들의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주장했으나 10·26사건으로 유야무야</p>	<p>공통</p>
<p>④ 마산항쟁에 총들먹인 경찰</p>		<p>·경찰은 마산항쟁을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소요로 방화 파괴행위를 자행하면서 화염병 각목 등을 사용하고 사제총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봄, 그러나 사제소총은 경찰의 조작이었음 ·경찰의 사제소총 징후 조작은 소요배후에 조직적 불순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유도하려함</p>	<p>차이</p>
<p>⑤ 불법적 군수 투입과 과잉 위압</p>	<p>·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 ·부산지역에는 군수사령관 박찬궁 중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역 군(제2관구사령부, 정성만 사령관)과 제1, 제3공수여단 투입 ·18일 오후 11시 전후에 공수특전사단 병력, 즉 제1공수여단·제3공수여단·제5공수여단 등 정예 군사력을 동원 투입 ·주역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하수인은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 ·공수부대를 동원한 것은 정국안정을 피하고자 했던 체제유지용</p>	<p>·10월 20일 정오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선포와 군 투입 ·마산지역에는 제39사단장 조옥식 소장을 위수사령관으로 하고 18일 지역 군(제39사령부)과 19일 제5공수여단 투입 ·부산으로 가던 제5공수여단을 마산지역에 투입(박정희 대통령이 박찬궁 부산계엄사령관에게 지시) ·제5공수여단, 부산 도착 즉시 인근 지역 마산시위 진압을 위해서 18일 오후 11시 전후에 마산으로 급파 ·공수부대는 데모군중도 아니고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은 양민들의 머리를 가격</p>	<p>공통</p>
<p>⑥ 계엄위원회(부산) 및 시국비상회의(마산) 개최</p>	<p>·10월 18일 아침 부산지역 계엄위원회 개최로 박찬궁 계엄사령관, 최석원 부산시장을 비롯, 정태근 부산지방검찰청 지검장, 송재근 부산시경국장, 구용현 부산시교육감, 정성만 제2관구사령관, 전병덕 부산지방법원장, 유의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등 계엄위원이 참석했으며, 이후에 이재화 계엄사참모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박구일 제7해병연대장 등이 추가됨</p>	<p>·10월 19일 상오 01시 30분에 마산경찰서에서 시국관련 비상회의 개최는 박종규 공화당의원, CIA장(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균범 경남도경 경찰국장, 전천수 경남도 교육감, 성해기 마산시장, 최창립 마산경찰서장, 조옥식 제39사단장(이후 마산창원지역 위수사령관) 등이 참석</p>	<p>공통</p>
<p>⑦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p>	<p>·부산지역에 10월 18일 자정 0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선포기로 의결한 것은 17일 오후 11시 30분경이었고, 실제로</p>	<p>·마산지역에 10월 20일 정오 12시 위수령이 선포되기 이전인 18일 오후 10시 45분부터 군부대가 투입돼 37시간 불법적으로 시위대를 다치는</p>	<p>차이</p>

이집 군부 투입 대 논란	는 오후 8시 30분경부터 군부 대가 투입돼 3시간 앞서 불법 적으로 시위대 진압	대로 검거	
---------------------------	---	-------	--

출처: 필자 작성

3.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한 부마항쟁 관련자의 남민전과의 연계성 음모

김재규의 증언은 자신이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기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임을 간파하였다는 주장이다. 남민전은 유신체제 타도를 목표로 하던 지하반체제 조직이었으나, 1979년 초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모조리 체포되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을 남민전과의 연계를 두고 강압적인 수사를 시켰으나 남민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다(조갑제 1987b, 103). 이는 부마항쟁을 일련의 조직사건으로 묶어 항쟁의 확산을 차단할 목적이었다. 경찰이 부마항쟁관련자들을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두고 고정간첩이나 남민전 지령으로 악용해서 고문하며 용공사건의 조작으로 엮으려고 했다(정주신 2017b, 265-266, 352-354). 김재규 중정부장이 충성경쟁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성격상 중앙정보부가 적발하지 못하고 경찰이 적발한 남민전 사건에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이상우 1985, 247). 결국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을 북한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항쟁관련자들의 남민전과의 연계성을 주장했으나,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유야무야됐다.

4. 마산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사제소총을 들먹인 경찰

최창림 마산경찰서장은 10월 20일 하오 5시에 '마산시 소요사건의 개요와 특징'을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마산에서 일부 학생과 불순분자가 합세해서 소요를 일으켜 공공건물을 방화 파괴하고 공용장비를 파괴했으며 상가점포를 파괴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고 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였다('최창림 마산경찰서장의 기자회견.' 1979/10/20; 한국일보, 1979/10/21;

경향신문, 1979/10/22). 경찰은 마산항쟁을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것으로 방화·파괴 행위를 자행하면서 화염병·각목 등을 사용하고 사제총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진실을 왜곡 보도하였다. 이들의 사제총기 조작행태는 18일 밤 10시 마산시 창동 황금당 골목 소요현장에서 불순 분자가 사제총기를 발사,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목격한 시민이 추격하자 현장에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사제소총 징후 조작은 마산항쟁 배후에 조직적 불순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유도하려는 점이다(한국일보, 1979/10/21; 경향신문, 1979/10/22). 그러나 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의 공판 및 검찰기록에서 사제소총 발견과 관련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산경찰서에서 송치한 기록에도 사제소총에 대해 수사한 기록은 없다.

5. 계엄위원회(부산) 및 시국비상회의(마산) 개최

김재규 정보부장은 18일 새벽 2시쯤 부산의 계엄사령부(군수기지사령부)에 나타나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박찬금 중장에게 "데모의 징후가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니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라."(정주신 2017b, 225)는 골자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10월 18일 아침 계엄사령부(박찬금 계엄사령관)에서 최석원 부산시장을 비롯, 정태근 부산지방검찰청 지검장, 송재근 부산시경국장, 구용현 부산시교육감, 정성만 제2관구사령관, 전병덕 부산지방법원장, 유의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등 계엄위원들이 모인 자리인 계엄위원회에도 참석했다. 계엄위원은 이후에 이재희 계엄사참모장,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박구일 제7해병연대장 등이 추가되었다. 부산지역에는 합동수사단(단장 권정달 대령)을 설치하고 보안사의 이학봉 중령, 중앙정보부의 김기춘 국장의 지원을 받아 소요주동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양서조합사건 등을 처리하였다(육군본부, 1982, 61-69). 10월 22일 계엄위원회에서는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에 대해 시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행동을 금지하고 차량에 승차, 교차로

등 요소에 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마산지역의 위수령은 10월 20일 오전 12시에 발동되었지만, 10월 19일 상오 01시 30분에 마산경찰서에서 시국관련 비상회의 개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 투입에 대한 의도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국비상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박종규 공화당의원, CIA장(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균범 경남도경 경찰국장, 전천수 경남도 교육감, 성해기 마산시장, 최창립 마산경찰서장, 조옥식 제39사단장(이후 마산·창원지역 위수사령관 겸직) 등이다(정주신 2017b, 317-318).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위수령은 마산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통하여 마산·창원지역 위수사령부에 요청하여 발동된 것으로 발표되었다’(경남매일, 1979/10/21; 동아일보, 1979/10/20; 서울신문, 1979/10/20).

6. 부산과 마산에 불법적 지역 군(軍) 및 공수부대 투입과정

박정희 정권은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폭발한 민주항쟁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폭압적인 비상계엄령(부산)과 위수령(마산·창원)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하였다. 부산지역에는 군수사령관 박찬궁 중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마산지역에는 제39사단장 조옥식 소장을 위수사령관으로 하고 각각 지역 군과 공수여단을 투입하였다. 지역 군부대(부산: 제2관구사령부 <사령관 정상만 소장>, 마산: 제39사단 <사단장 조옥식 소장>)의 병력투입은 부산에서 18일 오후 9시 30분경에, 마산에서 18일 오후 10시 45분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부산에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 해병 제7연대(연대장 박구일 대령)를, 마산에 제5공수(여단장 장기오) 병력을 투입하였다. 이들 병력은 10월 17일부터 18일 새벽까지 부산에 배치가 완료되고, 10월 18일 저녁에 마산에 완료되고, 계엄군이 진압 업무(충청작전)를 장악하게 되었다(이은진 2016b, 277). 한편 부산지역에 10월 18일 자정 0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선포키로 의결한 것은 17일 오후 11시 30분경이었고, 실제로는 오후 8시 30분경부터 군부대가 투입돼 3시간 앞서 불법적으로 시

위대를 진압하였다(조갑제 1987b, 49).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박찬궁 부산계엄사령관에게 전화로 "마산은 자네 책임지역은 아니지만 현지 지역 부대장(조옥식 제39사단장-필자 주)과 의논하며 마산지역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항('박정희 대통령의 하명사항', 연합뉴스, 2018/02/18 검색; 조갑제 1987b, 79)은 부산으로 내려가던 제5공수여단(여단장 장기오 준장)을 마산에 투입하라는 지시였다. 다만 제5공수여단이 부산 도착 즉시 인근 마산시위 진압을 위해서 18일 오후 11시경 투입된 시점은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1시간 전이고 마산에 위수령이 선포되기 37시간 전에 급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남대학교 소요사건 1차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마산지역에 10월 20일 오후 12시 위수령이 선포되기 이전인 18일 오후 10시 45분부터 37시간 불법적으로 군 투입이 있었으며, 닥치는 대로 시위군중을 검거한(경남매일신문, 1979/10/19)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위수령 발동 이전에 군 병력 투입,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연행과 체포는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즉 1979. 10. 18. 오후 10시 45분 제39사단 군인 6개 트럭 240~250명이 경찰서에 도착하였으며, 18일 자정(0시) 무렵 장갑차 3대와 제39사단장(조옥식 육군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하였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89, 45). 또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박찬궁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부산시위가 조용해질 무렵인 10월 19일 제5공수여단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마산으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한 것(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10/05/06)은 위증이 될 수 있다. 한편 김성주 경남도지사는 2010. 01. 30. 서면답변에서 "위수령은 법에는 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1979년 10월 20일 당시는 지사가 부재중 중앙정부에서 위수령을 발동하고 사후에 지사가 요청한 것처럼 요식을 합법화한 것으로, 당시 지사인 본인은 사후에 승낙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진실화해위원회 서면답변, 2010/01/30). 결국 박정희 정권이 이처럼 부산과 마산에 각각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동원한 것은 정국안정을 꾀하고 강고한 정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체제유지용이었다(정주신, 2014, 63). 더욱 황당한 것은 데모군중에게 곧

봉을 사용할 때는 어깨 밑을 때리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지만, 군인들은 데모군중도 아니고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은 양민들을 향해 주로 머리를 가격했다(조갑제 1987b, 64)는 것이다.

<표 3> 군 병력 출동 총괄(10.18~10.20일간)

釜 山		馬 山	
특전사 및 제1, 3공수여단	575/2,554	제39사단	72/759
해병 제7연대	107/2,037	제5공수여단	245/1,213
재무부대	65/1,153	탄약중대	2/52
		해군통제부	9/264
계 747/5,744		계 328/2,288	
총계 1,075/8,032			

7.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시위진압의 결과

「부마사태 관련자 처리현황(계엄사 발표)」에 의하면, 부산지역 연행자는 총 1,058명으로 훈방 471명, 즉심 526명이며, 민간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6명(불기소 12명), 군사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41명(불기소 2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국제신문, 1979/11/29). 마산지역의 경우, 「내부수사보고」에 따르면, 연행자는 총 505명으로 훈방 324명, 즉심 125명, 민간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5명(불기소 8명), 군사재판에 기소된 인원은 46명(불기소 2명)이라고 되어 있다(마산경찰서, 1979/10/29).

<표 4> 부마항쟁 관련 연행자 처리 상황

총 연행인원			처리상황					
			형사입건				즉심	훈방
			군사재판		민간재판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1,563명	부산	1,058명	41	2	6	12	526명	471명
	마산	505명	46	2	5	8	125명	324명
합 계			87명	4명	11명	20명	651명	792명

이상을 종합하면 부마항쟁과 관련되어 연행된 자는 총 1,563명으로 훈

방 총 792명, 즉심 총 651명, 민간재판 회부 총 31명(기소 11명), 군사재판 회부 총 89명(기소 87명)이다(마산경찰서, 「내부수사보고」 1979/10/29; 국제신문, 1979/11/29).

8. 부산과 마산의 항쟁관련자 재판 결과

1979년 11월 28일 계엄 군법회의는 기소된 8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명에게는 소요·방화·긴급조치위반 및 포고령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에서 2년까지를 선고하고, 단순가담자 67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 석방하였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과 동시에 형량이 줄어든 것이지, 만약 10·26사건이 없었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소요죄와 긴급조치 제9호로 장기간 구속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학생 이외의 사람들은 소요죄로 장기간 구속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계엄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은 20명은 1979년 12월 5일 긴급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9명은 12월 8일 형 집행면제로 석방되었고, 11명은 감형되었다. 감형된 11명 중 6명은 1980년 3월 6일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나머지 5명은 징역 6월에서 징역 3년까지를 선고받고,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민간법원에 기소된 11명 중 마산지역 경남대생 5명은 긴급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1979년 12월 7일 석방되었다가 12월 18일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역시 긴급조치 해제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V. 결론

이 글은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전개과정 및 진압과정에 있어 유신세력과 반유신세력 간의 행태적 요인과 부산과 마산이라는 지역적 차별요인 비교를 통해서 10월 부마항쟁의 진실규명과 역사적 성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비교분석은 <표 1>의 전개과정 쟁점사항과 <표 2>의 진압과정 쟁점사항의 비교표로 명시되었듯이 대체

적으로 공통점이 많으나, 차이점은 마산항쟁이 부산항쟁과 달리 전혀 준비 없는 교내시위와 도심시위로 미숙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마산항쟁은 시위 발단이나 교내시위, 학생들의 도심 진출과정이 구체적으로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과 염증에 대한 발로나 인식조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과 시위 주체세력도 모호할 정도로 즉자적일 따름이었다. 부산시위와 달리 마산시위가 갖추지 못한 것은 시위선언문과 시위 구호나 노래가 애당초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마산항쟁이 도심시위에서 선도시위대가 시위 구호와 노래로 창동네거리로부터 출발하여 가야백화점을 반환점으로 하여 진군하고 다시 가야백화점에서 불종거리로 회군하면서 마산항쟁의 불을 지핀 덕에 부산항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었다. 마산시위가 부산시위의 여파로 발발한 만큼 도심의 해방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학생과 시민들의 즉자적 참여로 질적 규정상의 민중항쟁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비(非)수도권에서 발생한 항거가 독재타도의 선봉역할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도 부산항쟁과 대동소이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산항쟁은 선동자가 경찰의 고문을 못 이겨 평소 친한 친구 이름을 불러댄 것이 주모자?로 엮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내시위와 도심시위를 하지도 않고서 한 것처럼 전개과정을 조작하고 왜곡시켰다는 데서 마산항쟁의 진실규명을 어렵게 해놓고 있다. 게다가 부마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이 마산항쟁의 조작된 영터리의 전개과정을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베껴쓰거나 일시(日時)를 알박기하며 발간한다는 데서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산적해서 법제도의 정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많은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부마항쟁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경(警)·검(檢)이 조작해 놓은 피의자조서를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써 오고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부마항쟁이 5·18항쟁, 6월항쟁과 더불어 3대 항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최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부실보고서, 거짓보고

서, 진압자위주보고서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부마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부산에서 개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 토론회에서 지난 3년여의 작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항쟁관련자를 범죄자로 덧씌운 피의자조서를 근간으로 내놓은 결과 영터리조서에 불과했다. 게다가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은 부산항쟁과 달리 몇몇 특정세력이 자료집과 증언록에서 주도자?인 양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신들의 영웅담을 써놓은 증언이야말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원천 부정하고 조작하며 농단하는 폐단을 보여주었다.

다음에서는 부마항쟁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나 문제점 및 왜곡된 사실을 나열하고자 한다.

첫째,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유는 올해가 부마항쟁 발발 3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일단의 세력들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온 작태가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마산편과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에서 소영웅주의에 빠진 몇몇 항쟁관련자의 증언 내용이 근 39여 년 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을 일삼은 결과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의 항쟁농단은 부마항쟁 전체의 폐단이 될 수 있으며 부산시민과 마산·창원시민 및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므로 이에 대한 이실직고 및 속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자료집과 증언집에 오류투성이의 기록과 증언에 앞장선 소영웅심을 가진 세력들이 마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는 단체를 장악 및 사유화해서 마산항쟁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을 조작과 오류로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마산항쟁관련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진실과 팩트가 묻어나는 자료집과 증언록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주도한 것인 양, 조작과 오류투성이의 항쟁농단을 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따라서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항쟁관련자의 증언 청취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며, 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 온 세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응징과 대응도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의거해 활동한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이 엮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는 마산항쟁의 진실규명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경(警)·검(檢)이 항쟁관련자들을 소요죄나 긴급조치 제9호를 덧씌우기 위해 조작해 놓은 피의자조서나, 검증되지 않고 폐간된 「마산문화」 제4호에 게재된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의 글을 또다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마산편에 같은 제목으로 재게재한 것은 특정세력에 의해 부마항쟁의 진실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농단해 놓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마산항쟁과 관련 없는 자가 참고문헌도 없고 증언자 50여명이라고 제시만 했지, 누가 증언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는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의 글을 통째로 베끼거나 중간 중간에 일시(日時)를 알박기하여 내놓은 것이 바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라는 것이다. 정부(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가 펴낸다는 명목으로 마산항쟁 전개과정의 진실을 더욱 호도하고 심하게 농단하고 왜곡한 것은 다수의 항쟁관련자들로서는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낸 부산과 마산·창원시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펴내고자 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는 편파적인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글에 의존하기보다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팩트가 살아있고 역사적 성찰이 묻어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속에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국민다수가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 진. 1992. 『청와대비서실1』. 서울: 중앙일보사.
- 김영명. 1985. 『제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서울: 한울.
- 김영수 역, S.E. 화이너. 1989. 『현대 정치와 군부: 군부정치의 비교정치학적 분석』. 서울: 현암사.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마산경찰서. 「내부수사보고」. 1979/10/29.
- 미(美)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 소위원회. 1986. 『플레이저보고서』. 서울: 실천문화사.
- 박원순. 1992. 『국가보안법연구2』. 서울: 역사비평사.
- 박oo. 1985.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마산문화」. 제4호.
- 박oo. 1989.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산/마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 연합뉴스, 2018/02/18 검색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부산/마산.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2011.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마산: 불휘.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민주화운동사』. 부산: 부산광역시.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2003.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부산: 민주공원.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편. 2018.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
- 서정근. 2007. "부마(釜馬)민주항쟁 투입 해병대의 '아름다운 휴가.'" 『신동아』. 통권 578호 (11월).
- 서중석 외. 2017.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유신의 붕괴』. 서울: 오월의 봄.
-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1990. 『부마에서 광주까지』. 광주: 샘물.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kbs2240/183502>(검색일: 2017/08/20).
- 육군본부. 1982. 『계엄사』.
- 이상우. 1985. 『비록 박정희시대 (2)』. 서울: 중원문화사.
- 이수연. 1985. "부마사태의 전모를 밝힌다." 『신동아』 (5월).

-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마산: 불휘
- 임혁백. 1995. “한국 권위주의의 실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제도, 문화, 엘리트.” 『국제정치논총』. 제35집 1호.
- 임현진. 2000. “민주화의 전주곡으로서 부마민주항쟁: 유신체제의 지연된 붕괴.”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부마·광주와 한국과 세계의 민주화」.
- 조갑제. 1987a. 『유고1』. 서울: 한길사.
- 조갑제. 1987b. 『유고2』. 서울: 한길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1986. 『한국경제정책 40년사』.
- 정근식. 1999. “한국 민주화와 부마항쟁.”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사업회 자료집,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 정주신. 2007. “10·26 사건의 배경 분석.”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권 겨울호.
- 정주신. 2011. 『한국의 정당정치1』. 대전: 프리마북스.
- 정주신. 2014. 『10월 부마민주항쟁』. 대전: 프리마북스.
- 정주신. 2017a. “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육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 긴급조치·부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2호.
- 정주신. 2017b. 『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 대전: 프리마북스.
- 차성환. 2014 『부마항쟁과 민중: 항쟁참여 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과주: 한국학술정보.
- 차성환. 2007. “부마항쟁과 지역 노동자 대중.” 『기억과 전망』. 통권 17호.
- 차성환. 2008. “부마항쟁과 노동자 정치사회학.”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3호.
- 최장집. 1997. “광주민주항쟁의 영향과 그 변화.” 518기념재단, 「5·18 학술심포지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Ⅳ』.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호. 부산: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홍순권. 2016. “총론: 부마항쟁 진상규명의 현황과 평가.” 『부마항쟁의

- 진실을 찾아서』. 서울: 선인.
- 국제신문. 1979/11/29. 경남매일. 1979/10/21. 경향신문. 1979/10/22. 동아일보, 1979/10/18. 동아일보. 1979/10/20. 서울신문. 1979/10/20. 한국일보. 1979/10/21.
- Bae-Ho Hahn & Ha-Ryong Kim. 1976. "Party Bureaucrats and Party Environment," in Dae-Sook Suh &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 Przeworski, Adam. 1986. "Problems in the study of Transition to Democracy." in G. O'Donnell & P. Schmitter & L.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Schmitter, Philippe C.. 1980. "Speculations about the Prospective Demise of Authoritarian Regimes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Woodrow Wilson Center Working Papers No. 60(september).
- Summary of the Walker Report.http://www.fjc.gov/history/home.nsf/page/tu_chicago7_doc_13.html (검색: 2015/09/20).
- US Senate Staff Report. 1973/02/18.
- http://www.fjc.gov/history/home.nsf/page/tu_chicago7_doc_13.html (검색: 2017/07/23)

투고일 : 2018년 2월 15일 · 심사일 :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8일

* 정주신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정치사회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10월 부마항쟁사: 유신체제의 붕괴』(프리마북스, 2017), 『10월 부마민주항쟁』(프리마북스, 2014), 『5·18 민주화운동』(프리마북스, 2014), 『6월 항쟁』(프리마북스, 2014), 『한국의 정당정치: 군부·체제·집권당』(프리마북스, 2011), 『탈북자 문제의 인식 1, 2, 3』(프리마북스, 2011, 2012) 등이 있다.

<Abstract>

The Truth about October Buma Uprising and Historical Reflec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an Uprising and Masan Uprising

Chung, Joo-Shin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The Buma Uprising, which took place in Busan and Masan from 16 to 20 October 1979, was a challenge against the contradictions of the Yushin Regime. Only after 6 days from the insurrection, the 10·26 Accident transpired, in which the then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ssassinated, and the Buma Uprising, which acted as the fuse to the shooting, remained as an ‘incomplete uprising’. To commensurate with the subject of the paper ‘The Truth about Buma Uprising and Historical Refl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uprising began, unfolded, and oppressed by comparing it with Busan Uprising and Masan Uprising. It also focuses to discuss, in detail, the effect of the demonstration by colleg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nd suppression by the forces of the police and military on President Park and his government. This year, we celebrate the 39th anniversary of Buma Uprising, and with all the issues of discovering the truth, restoration of reputation and more, there are decisions and resolves to make including amendment of the legal system. However, there are certain groups of people who act as they led the uprising and mislead and exploit the facts of the events through illegitimate records and testimony, making it impossible to determine the truth. Discovering the truth will require acquisition of objective materials, testimony of those involved in the event and field research as well as imposition of legal and social punishment on those who distorted the truth about the event.

Key words : Yushin Regime, President Park Chung-hee, October Buma Uprising, Busan Uprising, Masan Uprising, 10·26 Accident